

남정집 [행정학박사, 공무원시험출제위원, 아모리이그잼고시학원,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외래교수]

### I. 시험강평

고교출신자를 공직에 채용하기 위하여 공통선택과목으로 행정학개론이 채택되었다 다른 선택과목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하여 난이도가 너무나도 대폭 하향하였다, 출제경향으로는 (1) 기본서에 있는 기본이론을 통한 추론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2) 단순암기문제가 다수 출제 출제되었다. (3) 기본서에 언급된 보편적인 학자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4) 출제위원들이 출제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률과 관련한 문제를 출제하였다. (5) 그간 예측가능한 문제들, 즉 기출문제를 변형한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6) 보너스형 문제도 다수 출제 되었으며 전범위에서 골고루 출제되었다.
---

### II. 출제경향 및 단원별 출제 분포도

참행정학 기본서와 문제풀이로 공부가 이루어진 수험생은 100점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루턴화된 룰에 의하여 출제되었다. 이번 시험은 보편적인 학자를 묻는 지문과 법률과 연계된 이론에서 출제비중이 높았다. 특히, 시사적인 이슈가 되는 분야, 또는 행정학회세미나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분야에서 출제빈도가 높았다.

단원별	출제비중	법률
1편. 행정학 총설	20%	0%
2편. 정책학	20%	0%
3편. 행정조직론	10%	0%
4편. 인사행정론	15%	0%
5편. 재무행정론	5%	5%
6편. 행정환류론	5%	0%
7편. 지방행정론	0%	15%

### III. 수험 대책

누차 강조하듯이 행정학개론은 살아 움직이는 유기체와 같은 학문이다,  
고로 정부정책변화에 예의주시하면서 기본교과내용과 접목시켜 공부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하겠다.

틈틈이 신문을 구독하면 자연스레 감각이 생길거라 사료된다.

사회과학의 시작은 명확한 용어정리부터 라는 말이 진리이다

고로 동의어와 상대어를 구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기본서에 충실하며 기본서에서 언급하지 못한 분야는 문제집을 통해서 보완하는 지혜가 요구된다. 보편적인 학자는 단순암기하고 이론은 이해를 통한 추론능력을 함양해야 한다.

## 사회복지직 행정학 개론 기출문제<2014. 3. 22 시행>

문1. 역량평가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일종의 사전적 검증장치로 단순한 근무실적 수준을 넘어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승진과 성과급 지급, 보직관리 등에 활용된다.
ㄷ. 조직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 내외의 모든 사람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증진시키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ㄹ. 다양한 평가기법을 활용하여 실제 업무와 유사한 모의상황에서 나타나는 평가 대상자의 행동 특성을 다수의 평가자에 평가하는 체계이다.
ㅁ. 미래 행동에 대한 잠재력을 측정하는 것이며 성과에 대한 외부변수를 통제함으로써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ㄹ,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 ②] ㄴ은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설명이다.

ㄷ은 다면평가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출제경향 : 중앙부처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청 같은 경우에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유인 즉 비고시출신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행정법무대학원 강의 내용> <참행정학.p. 621>

<참고> 역량평가

- ① 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에 따라 고위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역량을 구비했는지를 사전에 검증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② 2006년 고위공무원단 시행과 더불어 도입하였으며 2010년에는 하위직으로까지 확대되었다.  
 ③ 중앙인사기관인 안전행정부에 역량평가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마포구 일진빌딩에 입주해 있다.

구 분	과장급 역량평가	고위공무원단 역량평가
평가역량(6개)	정책기획, 성과관리, 조직관리, 의사소통, 이해관계조정, 동기부여	문제인식, 전략적 사고, 성과지향, 변화관리, 고객만족, 조정통합
평가과제(4개)	발표, 역할연기, 서류합 기법, 집단토론	1 : 1 역할수행, 1 : 2 역할수행, 서류합 기법, 집단토론
난이도 (과제복잡성 등)	70%	100%
평가시간	4시간 20분	6시간

<안전행정부 자료>

문2. 행정학의 주요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선택론 - 인간을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지나친 단순화이다.
- ② 거버넌스론 - 내재화된 변수가 많고 변수 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형화가 어렵다.
- ③ 신제도론 - 제도와 행위 사이의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 ④ 과학적 관리론 - 인간을 지나치게 사회심리적이고 감정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정답 ④] ④는 인간관계론의 특성이다.<참행정학.p.142>

<출제의도 : 과학적 관리법과 인간관계론 비교하기>

④는 인간관계론에 대한 설명이다. 과학적 관리론은 인간을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존재로 인식한다.

문3. 공무원 개인이나 조직의 일탈에 대한 감시화 처벌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는 행정통제 (administrative control)는 행정의 책임을 확보하려는 수단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외부통제기관으로만 구성된 것은?

ㄱ. 국민권익위원회	ㄴ. 기획재정부	ㄷ. 법원	ㄹ. 국회
ㅁ. 시민단체	ㅂ. 감사원		

- 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ㅂ
- ③ ㄷ, ㄹ, ㅁ                      ④ ㄷ, ㅁ, ㅂ

[정답 ③] ㄱ, ㄴ, ㅂ은 내부통제기관에 해당한다.

<출제의도 : 행정통제 유형으로 내부통제와 외부통제 비교하기>

<참고> 행정통제의 유형<참행정학.p.816>

길버트(Gilbert)는 ① 외부·공식적 통제, ② 외부·비공식적 통제, ③ 내부·공식적 통제, ④ 내부·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나,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통제주체와 작용방향에 따라 크게 외부 통제와 내부통제로 전개하고자 한다.

행정통제의 유형

구 분	공식성	통제유형	통제내용
외부통제 (정치, 행정 2원론)	외부· 공식통제	입법통제	정책결정권, 예산심의, 재정통제, 국정감사, 국정조사 등
		사법통제(사후적)	행정소송, 판례 등
		옴부즈만제도	행정감찰관(ombusman)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에 관한 사무
외부· 비공식통제	외부· 비공식통제	국민통제	선거, 투표, 이익집단, 여론, 시민단체 등
		행정수반에 의한 통제	임명권, 행정입법, 행정개혁
내부통제 (정치, 행정 1원론)	내부· 공식통제	정책 및 기획통제	17부3처17청에 의한 통제
		운영통제(관리통제)	정부업무평가
		요소별 통제	법제통제, 예산 및 결산통제, 정원 및 인사통제 등
		절차통제	보고와 지시, 품의제, 민원처리온라인시스템 등
		감사원에 의한 통제	직무감찰, 회계검사, 결산확인, 사후적 통제 등
		중앙통제	자치단체에 대한 인사·조직·관리·재정상 통제

	계층제적 통제	조직 내 명령복종관계를 전제로 상관이 부하를 통제
내부·비공식통제	행정윤리	자발적 행동기준
	대표관료제	사회 각 계층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
	공무원노조	부정부패
	내부고발자 보호제	내부적·자발적·비공식적 통제
	비공식조직	행정문화

문4. 전통적으로 정부는 시장실패의 교정수단으로 간주되었으나 수입할당제, 가격통제, 과도한 규제 등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오히려 시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정부실패의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① 공공조직의 내부성(internality)
- ② 비경합적이고 비배타적인 성격의 재화
- ③ 정부개입으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파생적 외부효과
- ④ 독점적 특혜로 인한 지대추구행위

[정답 ②] ②는 공공재의 과소공급으로 인한 시장실패 원인이다.

<출제의도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 원인 비교하기><참행정학.P.88>

구분	시장실패	정부실패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재의 존재나 공급부족(비배제성, 비경합성)</li> <li>• 외부효과(외부경제 및 외부불경제)</li> <li>• 독점의 존재, 불완전경쟁, 완비하지 못한 시장, 비용체감, 수익의 증가, 사회적 비용증가</li> <li>•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빈부격차심화</li> <li>• 정보의 비대칭성(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li> <li>• 인플레이션 초래</li> <li>• 시장의 불안정성</li> <li>•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이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조직의 내부성, 내부목표와 사회적 목표의 괴리, 사적목표설정</li> <li>• 파생적 외부효과(비의도적 효과 확산)</li> <li>• 비용과 수익의 분리, 양출제입</li> <li>• X-비효율성, 기술적 비효율성</li> <li>•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배분의 불공평성, 권력의 편제</li> <li>• 정부의 독점서비스 공급, 비용체증, 공기업증가</li> <li>• 스태그플레이션</li> <li>• 높은 시간 할인율, 지대추구이론, 포획이론</li> <li>• 비민주적인 행정관행(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관료의 도덕적 해이)</li> </ul>

문5. 정책변동의 유형 중 정책평가로부터 얻은 정보가 정책채택 단계에서 다시 활용되는 경우로 정책목표는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을 새로운 수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 ① 정책유지
- ② 정책혁신
- ③ 정책종결
- ④ 정책승계

[정답 ④] 혹우드와 피터스(Hogwood - Peters)의 정책승계(정책계승)에 대한 설명이다.

<출제의도 : 정책변동의 종류 이해하기><참행정학.P.283>

<참고> 정책변동의 유형 (Hogwood와 Peters의 견해)

문제의 등장	문제의 지속	문제의 변질	문제의 소멸
정책혁신	정책유지	정책승계	정책종결
무에서 유를 창조	소폭변경	대폭 변경 또는 대체	대체 ×

문6.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순환보직을 통해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공직에 자리가 비었을 때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계급을 신분과 동일시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 ④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된다.

[정답 ②]<참행정학.P.596>

<출제의도 : 인간중심의 계급제와 직무중심의 직위분류제 비교하기>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으로 공직에 자리가 비었을 때 내부 충원을 원칙으로 한다. 외부충원하는 개방형은 직위분류제의 특성이다.

<참고> 계급제와 직위분류제 비교

구분	직위분류제	계급제
분류 기준	직무의 종류·책임도·곤란도(종적분류+ 횡적분류), 직무중심	개개인의 자격·능력·신분(횡적분류), 인간중심
발달 배경	산업사회	농업사회(신분사회)
채용 국가	미국·캐나다·필리핀, 프에르토리코	영국·독일·일본, 불란서, 한국
관리 기법	과학적 관리법	인간관계론
시험·채용	합리성	비합리성
자질	전문행정가 양성	일반행정가 양성
보수 정책	직무급(동일직무 동일보수의 형평성, 합리적 보수제도)	자격급·생활급(생계유지수준을 지급하는 비합리적 보수제도)
인사 배치	비신축성(횡적 의사소통곤란)	신축성(횡적 의사소통용이)
행정 계획	단기 계획·단기 능률·단기안목	장기 계획·장기 능률·장기안목
교육 훈련	전문지식 강조	일반교양강조

조정·협조	곤란(할거주의 초래)	용이
충원형	개방형	폐쇄형
신분보장	약함	강함
직업공무원제	확립곤란	확립 용이
조직구조와의 관계	연계성 높음	연계성 부족
인사운영의 탄력성	낮음	높음
공직경직성	낮음	높음
창의력, 능력발전	불리	유리
도입요건	대규모 조직	소규모 조직
적용계층	하위계층	상위계층

문7.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의 하나인 조정교부금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특별시·광역시 내 자치구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재정수요와 재정수입을 비교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전할 목적으로 내국세의 적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것이다.  
 ㄷ. 지방정부가 수행하는 업무 중에서 국가사업과 지방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특정 사업에 대하여 경비 일부의 용도를 지정하여 부담한다.  
 ㄹ.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은 시세 수입 중의 일정액을 확보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②] ㄱ, ㄷ만 옳다.

<출제의도 : 의존 재원 구분하기><참행정학.P.943>

ㄴ은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에 대한 설명이고, ㄷ은 국고보조금 중 단체위임사무를 위임한 대가로 지급하는 부담금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의존재원

(1) 종류

우리나라에서 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① 지방교부세, ② 국고보조금 ③ 조정교부금, ④ 재정보전금이 있다.

1. 국가에 의한 조정재원

구 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법적 근거	지방교부세법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재 원	내국세의 19.24%, 종합부동산세 100%	일반회계, 특별회계예산
용 도	일반재원(용도지정×)	특정재원(용도지정0)
불균형 시정	수직적 불균형 시정(국가-자치단체) 수평적 불균형 시정(자치단체 간)	수직적 불균형 시정
지방부담	없음(정액보조)	있음(정률보조) - 기준보조율 - 차등보조율(기준보조율을 가감)
종 류	분권교부세 : 내국세의 0.94%(2014년까지 존속하며 국고보조사업을 이양받은 자치단체에 교부) 보통교부세 : 국세의 96%(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96%) 특별교부세 : 내국세의 4%(용도0), (분권교부세를 제외한 교부세총액의 4%) 부동산교부세 : 종합부동산세(국세) 도입에 따른 시·군·자치구의 재원감소분 보전을 위해,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 시·군·자치구에 전액교부	협의를 보조금(고유사무 장려) 부담금(단체위임사무-공동부담) 교부금(기관위임사무-국가전액)
재 량	확대	축소
기 능	재정격차의 시정	자원배분기능
기타 사항	㉠ 보통교부세 교부기준 : 미달액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 재정력지수 : 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요액 ㉢ 재정력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보통교부세를 교부하지 않음(특별교부세는 별도로 교부가능) ㉣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켜야 한다. ㉤ 세계잉여금으로 편성 ㉥ 예측가능, 안정적인 재원 ㉦ 안전행정부에서 관리	㉠ 차등보조율 : 기준보조율에서 일정비율을 가감하는 것으로서, 차감하는 차등보조율은 지방교부세법에 의한 보통교부세를 교부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 한하여 적용 ㉡ 국가가 자치단체 감독이 용이 ㉢ 불안정한 재원 ㉣ 예측이 곤란 ㉤ 중앙정부재량행위 ㉥ 안전행정부에서 관리

◎ 기준재정수입액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액의 80%로 책정되어 있다.

## 2.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재정조정

구 분	재정보조금	조정교부금
교부주체	도	특별시, 광역시
교부대상	시, 군	자치구
조정제원	광역시세 및 도세 수입의 27% (단, 50만 이상의 시는 47%)	취득세, 등록세의 일부를 조례로 정한대로 교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미달액)
불균형 시정	불균형 시정	불균형 시정
종 류	일반재정보조금, 시책추진보조금, 특별재정보조금	일반교부금(90%), 특별교부금(10%)

문8.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경제발전, 효율성, 공공서비스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경직적인 관료제의 병리와 국가부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예산제도를 도입하였다. 정부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을 추진하면서 제안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결과보다 기획 기능의 강조
- ② 회계 책임의 명확화
- ③ 모든 대안에 대한 검토
- ④ 사업과 예산의 연계

[정답 ④] 성과주의 예산은 (세부)사업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제도이다.

<출제의도 : 시크(A. Schick)가 분류한 예산기능에 따른 예산제도의 발달과 관련하여 예산의 기능을 ㉠ 통제적 기능, ㉡ 관리적 기능, ㉢ 기획적 기능으로 나누고 있다는 점 이해하기>

①은 기획예산, ②는 품목별 예산, ③은 영기준 예산에 대한 설명이다.

<참고> 예산제도의 비교<참행정학.P.778>

비 교	품목별 예산	성과주의 예산	계획예산	목표관리	영기준 예산	정치관리형 예산
기본 방향	통제	관리	기획	관리	감축	하향식 편성
예산과정	예산집행	예산편성	예산편성 이전	내부고객 참여	개혁	
정보범위	지출대상	부처의 활동	부처의 목표	사업의 결과	의사결정단위 목표	사업계획 또는 전체목표
정책결정 유형	집중적, 분산	집중적, 분산	합리적, 중앙집중	양적 목표, 분산	부분적·총체적, 분산	체제적·적극적
중앙 예산기관 관심	지출의 합법성	능률성	기획, 정책	능률성	사업의 우선순위	전체 목표에의 기여도
시 계	미시	미시	거시, 개방체제	미시	미시, 폐쇄체제	
분류체계	예산구조와 일치	예산구조와 일치	불일치		불일치	
특성	회계책임 명확	단위원가 × 업무량	기획중시	계산참여	모든 대안 분석	성과주의와 목표기준예산
관리책임	분산	중앙	감독자(중앙)			
계획책임	분산	분산	중앙	분산	분산	중앙
인 식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경영학	발생주의	발생주의

문9. 영·미권을 중심으로 정부규모 축소, 재정적자 감축,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채택한 신공공관리론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 ① 규정과 절차를 강화하고 관료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한다.
- ② 민간부문의 관리기법을 도입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③ 시민을 고객으로 인식해 고객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민간위탁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

[정답 ①] ①은 전통적 관료제에 대한 설명이다.<참행정학.P.175>

<출제의도 : 정부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두한 신공공관리론 이해하기>

<참고> 전통적 관료제, 신행정학, 기업가형 정부·신공공관리론의 비교

전통적 관료제	신행정학	기업가형 정부 · 신공공관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갯기</li> <li>• 공공재 강조</li> <li>• 서비스 독점(집권화)</li> <li>• 규칙, 과정, 절차, 통제</li> <li>• 투입중심의 예산제도(LIBS)</li> <li>• 기관중심</li> <li>• 지출위주</li> <li>• 치료중심적 정부</li> <li>• 계층조직(경성, 상명하복)</li> <li>• 행정메커니즘(정치적결정)</li> <li>• 문제제기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큰 정부</li> <li>• 격동기 혼란극복</li> <li>• 사회적 형평성</li> <li>• 고객중시</li> <li>• 분권화</li> <li>• 참여중시</li> <li>• 큰 정부, 작은 시장</li> <li>• 처방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향키(steering) 역할 : 촉진적 정부</li> <li>• 경쟁도입 : 참여, 작은 정부</li> <li>• 민간위탁(분권화)</li> <li>• 결과 · 성과 · 산출 중시</li> <li>• 성과지향적 예산 (신PBS)</li> <li>• 고객중시</li> <li>• 수익중시 : 고객지향적 정부</li> <li>• 예측과 예방 : 미래예견적 정부</li> <li>• 탈계층조직(연성)</li> <li>• 시장메커니즘(시장주의)</li> <li>• 문제해결형</li> </ul>

문10. 다음 내용을 모두 특징으로 하는 리더십의 유형은?

- 추종자의 성숙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 리더십은 개인의 속성이나 행태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는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 ① 변혁적 리더십
- ② 거래적 리더십
- ③ 카리스마적 리더십
- ④ 상황론적 리더십

[정답 ④] 리더십 이론 중 상황변수에 따라 리더십의 효율성이 달라진다는 상황론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출제의도 : 리더십 전개 이론 중 상황론적 리더십 이해하기><참행정학.P.470>

- 추종자의 성숙단계에 따라 효율적인 리더십 스타일이 달라진다.- Hersey & Blanchard의 생애주기이론으로 3차원적 리더십이다.
- 리더십은 개인의 속성이나 행태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 상황론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이다.
- 가장 유리하거나 가장 불리한 조건에서는 과업중심적 리더십이 효과적이다.- Fiedler의 상황적응론적 리더십이론이다.

문11. 전통적인 기계적 조직과 구별되는 학습조직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능보다 업무 프로세스 중심으로 조직을 구조화한다.
- ② 위계적 통제보다 구성원 간의 수평적 협력을 중시한다.
- ③ 학습조직 활성화에 리더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다.
- ④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구성원의 권한 강화(empowerment)를 강조한다.

[정답 ③] 지식사회 모형인 학습조직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며 구성원들이 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사려 깊은 리더십이 중요하다.

<출제의도 : 유기적 구조인 학습조직과 기계적 구조인 관료제 비교하기><참행정학.P.418>

<참고> 효과적 학습 조직이 되기 위한 방법(Senge의 이론)

구 분	관료조직	학습조직
리더십	하위관리자 역할로 리더십 등한시	최고관리자 (리더)역할 중시
인 간	X이론	Y이론
업무배분	원자적 구조(atomistic structure)	공동체적 자아
의사결정의 틀	개인적 학습	관계적 학습
미래 행동의 기반	최근의 과거 경험	온라인(on-line) 학습
업무의 기초	독점적 권한	공동생산
행 동	위계적 통제	구성원의 권한 강화
변화 발생 상황	조직의 자기정체성 및 안정성	지식의 창출
업무수행	기능 중시	일의 흐름 중시
목표 확인	경계화	탈 경계화
관리적 개선 결과	통제된 생산성	자율적 생산성

문12. 행정체제 내에서 조직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되고, 부패가 일상적으로 만연화되어 있는 상황을 지칭하는 부패의 유형은?

- ① 일탈형 부패
- ② 제도화된 부패
- ③ 백색 부패
- ④ 생계형 부패

[정답 ②] 제도화된 부패에 대한 설명이다.<참행정학.P. 669>

<출제의도 : 최근 규제 개혁과 관련한 부패유형 이해하기>

①번 일탈형 부패는 무허가업소를 단속하던 단속원이 금품을 제공하는 특정 업소에 대해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이다.

②번 제도화된 부패(systemic corruption) : G. E. Caiden이 말하는 제도적 부패는 행정 체제 내에서 부패가 실질적인 규범의 위치를 차지함으로써 조직의 본래적 임무수행을 위한 공식적 행동규범이 예외적인 것으로 전락한 상황을 가리킨다. 체제화된 부패(systemic corruption)라고도 한다. 부패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한 구성원이 조직의 옹호를 받는 반면에 공식적 행동규범을 고수하려는 구성원들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특성으로는 ① 부패저항자에 대한 제재와 보복 ② 부패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 ③ 실제로 지켜지지 않는 반부패 행동규범의 대외적 표방이며 제도적 부패와 대비되는 우발적 부패는 사건 자체의 연속성이 없으며, 구조화되지 않은 부패를 말한다. 예로서 민원처리 과정에서 소위 ‘급행료’가 당연시되는 관행은 제도화된 부패에 해당된다.

③번 백색부패(白色腐敗)는 이론상으로는 일탈행위로 규정될 수 있으나 구성원의 다수가 어느 정도 용인하는 부패를 말한다, 선의의 부패로서 용인할 수 있는 관례화된 부패, 떡값과 같은 관행으로 치부하는 행위

④번 생계형 부패를 작은부패(petty corruption)라고 부르기도 한다.

문13.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의 제공’은 로위(T.J.Lowi)의 정책유형 중 어느 정책에 해당하는가?

- ① 배분정책
- ② 규제정책
- ③ 재분배정책
- ④ 구성정책

[정답 ①] 설문은 배분정책에 해당한다.<참행정학.P.214>

<출제의도 : 정책유형의 대표적 학자인 로위(T.J.Lowi)의 정책유형 이해하기>

<참고> 배분정책[Non Zero-sum : 비영화(非零和)]

① 개인, 집단, 기업, 지역사회 등 인구의 특정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이득의 분배에 관한 정책이다.

② 경제유형 중 국민들에게 권리나 혜택 또는 서비스를 나누어 주는 배분정책 (distributive policy)에 속하는 사례로는 고속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 항만, 비행장 건설, 기업체에 창업지원금이나 수출보조금 지급, 아파트대출금, 국·공립학교를 통한 교육서비스 등

이 있다.

③ 18C 말 미국 토지정책(국유지 불하)에서 유래한다.

④ 정책의제화가 용이하다.

문14. 정책결정의 유형 가운데 린드블롬(Lindblom)과 윌다브스키(Wildavsky) 등이 주장한 점증주의(Incrementalis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합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직관과 통찰력 같은 초합리적 요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② 기존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를 조정하여 정책대안으로 결정한다.

③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과 조정의 산물이다.

④ 정책의 목표와 수단은 뚜렷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 분석은 한계가 있다.

[정답 ①] ①은 Y. Dror가 연구한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다.

<출제의도 : 정책결정 모형 이해하기><참행정학.P.291>

이론모형	접근법	특 성	학 자	비 판
합리모형 (제1형) • 총체주의 • 뿌리째 뽑기식 모형	이상적 규범적 총체적 가치적 포괄적 합리적 연역적 낙관적	① 이 념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 추구 ② 가 정 • 사회적 목표, 사회적 가치가 명백하게 주어져 있다. • 인간의 전지전능성 • 인간은 경제적 합리인 • 정책결정의 일반적 과정의 순서에 입각하여 결정한 모형 ③ 내 용 • 목표와 수단 구별(목표-수단분석), 목표는 고정, 수단이 목표를 통제 • 모든 대안의 탐색 • 대안이 초래할 결과의 완전한 예측 가능 • 과학적·계량적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완전한 경제적 합리성 추구	과학적 관리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간의 지적 능력에 한계</li> <li>• 완전한 대안의 선택·발견에 시간과 비용 소비</li> <li>• 인간의 주관적 가치판단을 고려하지 않으며, 인간사회의 동태적 요소를 경시하는 폐쇄이론</li> <li>• 매몰비용의 문제</li> <li>• 결과에 대한 완전한 예측에는 한계가 있다.</li> <li>• 목표의 가변성, 유동성</li> </ul>
만족모형	현실적	① 이 념 제한된 합리성 (인지상의 합리성) 추구 ② 내 용 정책결정자, 개인의 주관적·심리적인 만족화 수준에서 정책결정을 도모하는 모형	Simon, Barnar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만족화의 척도가 없다.</li> <li>• 만족수준은 현실 만족수준이고,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li> <li>• 혁신적·창조적 대안 탐색활동이 없다.</li> <li>• 조직의 차원을 설명할 수가 없다.</li> </ul>
점증모형 (제2형) • 다원화된 선진국형 • 부분적·지엽적 모형 • 가치치기식 모형	구체적 실증적 경험적 귀납적 비관론	① 이 념 정치적 합리성 추구 ② 내 용 • 다원화된 선진국 사회에서 정부, 이익집단 등 정치집단의 협조·조정·타협에 의해 현실사회를 약간 개선·점증시키는 선상에서 정책결정을 도모 • 한정된 대안만 탐색(계속적) • 목표와 수단의 구별을 꺼린다. • 우리나라의 예산결정이론과 일치하는 정책결정모형	Lindblom, Wildavsk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성도 없으며, 단기정책에만 관심, 보수적 성향</li> <li>• 개도국에 적용 불가</li> <li>• 권력, 영향력이 강한 집단에만 유리</li> </ul>
혼합탐사모형 (제3모형) • Mixed-Scanning Model • Active-Society	혼합적 접근	제1형(합리모형) ⇨ 기본적 결정 + 제2형(점증모형) ⇨ 특수한 상황 • 합리모형의 이상성을 극복하기 위해 점증모형 첨가, 점증모형의 보수성 극복을 위해 합리모형과 혼합결정 •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장점만을 살린 혼합모형이다.	Etzioni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론적 독자성이 없다.</li> <li>• 기본적 상황과 특수한 상황을 구별하기 곤란하다.</li> </ul>
최적모형	최적화 접근	제1형(합리모형) + 정책결정자의 직감·영감·육감이라는 통찰력, 초합리성 같은 정신적인 면을 강조	Lasswell, Dr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너무 유토피아적인 모형</li> <li>• 엘리트에 의한 비민주적 정책 결정 우려</li> </ul>

- 혼합탐사모형을 비판하고 최근에 주장한 모형
- 상위정책결정, 초정책결정, 선택정책결정과 관련된 모형
- 가장 규범적·질적·이상적인 모형
- feedback 기능 강조
- 정책결정의 가외성 장치 인정으로 신뢰성 향상모형

- '최적'의 기준 불분명
- 정책결정에 있어 사회적 과정에 대한 고찰 불충분

문15. 우리나라 정부의 예산편성 절차를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예산편성지침 통보
- ㄴ. 예산의 사정
- ㄷ.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
- ㄹ.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 ㅁ.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 ① ㄱ - ㄷ - ㅁ - ㄴ - ㄷ
- ② ㄷ - ㄱ - ㅁ - ㄴ - ㄷ
- ③ ㄱ - ㅁ - ㄷ - ㄷ - ㄴ
- ④ ㄷ - ㄴ - ㄱ - ㅁ - ㄷ

[정답 ②] ②가 옳은 지문이다.

<출제외도 : 개정된 법률 이해하기><참행정학.P.735>

<참고> 예산편성단계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신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 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4.1.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신구 판례**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4.1.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사정할 때 예산사정공무원과 각 부처의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

사이에서 기획재정부의 사정관은 예산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삭감하려 하고 해당부처 공무원은 이를 방어하고 설명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예산협의’라고 한다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판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시행일 2014.1.1]]

⇒ 정부의 예산안 및 이와 관련된 국가재정운용계획 등 재정 관련 자료의 국회 제출시기를 현재의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에서 ‘120일 전까지’로 앞당기되, 2014년에 제출되는 2015년 예산안 등의 제출일은 현행 대비 10일 앞당기고,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 그 다음해는 추가로 10일을 각각 앞당겨 최종 30일을 앞당기도록 하는 한편,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해당 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한다.

문16. 정부 내의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배치전환의 본질적인 용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 ① 선발에서의 불완전성을 보완하여 개인의 능력을 촉진한다.
- ② 조직 구조 변화에 따른 저항을 줄이고 비용을 절감한다.
- ③ 부서 간 업무 협조를 유도하고 구성원 간 갈등을 해소한다.
- ④ 징계의 대응이나 사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

[정답 ④] 배치전환은 공무원이 종래의 책임수준과 같은 직위로 이동하는 것, 즉 동일등급 내의 인사이동으로서 보수액의 변동이 수반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전직·전보·과건근무·전입 등이 있다. ④는 소극적인 용도로 본질적인 용도와 관련이 없다.

<출제의도 : 배치전환을 통한 공직에 대한 부적응 해소 이해하기><참행정학.P.611>

소극적인 용도	적극적·본질적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징계의 수단</li> <li>㉡ 사임의 강요수단</li> <li>㉢ 부정·부패의 방지수단</li> <li>㉣ 개인적 특혜의 제공수단</li> <li>㉤ 개인 세력의 부식(확장)수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직 부적응 해소</li> <li>㉡ 인간관계 개선</li> <li>㉢ 행정조직·관리상의 변동에 의한 배치조정</li> <li>㉣ 업무수행에 대한 권태방지와 조직의 활성화</li> <li>㉤ 공무원의 능력발전(Generalist의 양성)</li> <li>㉥ 행정조정·협조의 촉진</li> <li>㉦ 비공식 집단의 폐해 시정</li> <li>㉧ 개인의 희망 존중</li> <li>㉨ 승진에의 유인</li> </ul>

문17. 정부가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산출은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치는 공식적 참여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 ② 대통령 비서실장
- ③ 정당 사무국장
- ④ 국회의원

[정답 ③] 공무원은 공식적 참여자이며 ③은 비공식적 정책참여자이다.

<출제의도 : 보너스문제로 공식적 참여자와 비공식적 참여자 비교하기><참행정학.p.258>

<참고> 정책결정 참여자

(1) 공식적 참여자

- ① 국회의원
- ② 대통령(미국의 경우) : 제약요인으로서 시간부족, 정보왜곡, 전문지식의 부족, 자원부족, 공약 등이 존재한다.
- ③ 행정부처 장관
- ④ 관료집단
- ⑤ 사법부
- ⑥ 헌법재판소
- ⑦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⑧ 지방자치단체 장
- ⑨ 국무총리

(2) 비공식적 참여자

가. ① 정당(→공약·정강에 의해 각종 요구를 정책대안으로 전환하는 ‘이익결집기능’수행),

② 이익집단(→이익표출기능), ③ 시민단체(NGO), ④ 일반국민, ⑤ 전문가, ⑥ 언론기관

나. 전문가는 ① 정책의제 문제제기, ② 정책결정시 전문지식이나 정보의 제공, 조언이나 보좌, 자문기능 수행, ③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책평가 등의 기능을 한다.

분류	목적	형성국가	조직형태
이익집단	이익	다원주의	공식조직
정당	정권획득	민주주의	공식조직
NGO	정책감시, 비판기능	다원주의	공식조직
언론	비판기능	민주주의	
전문가	전문지식 제공	다원주의	

문18. 주인과 대리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기된 대리인 이론(Agency Theory)에 대한 설명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 ① 주인과 대리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행위자이다.
- ② 대리인의 선호가 주인의 선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대리인에게 불리한 선택으로 인한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둔다.
- ④ 주인과 대리인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정답 ③] ③은 주인(위임자)에게 불리한 선택을 하는 문제가 초래한다.

<출제의도 : 경제학적 기법의 접목 이해하기><참행정학.p.87>

<참고> 주인-대리인이론

(1) 개 관

재화와 용역의 수요자를 일종의 위임자로 보고 공급자를 대리인으로 볼 때, 양자의 관계는 서로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일정계약에 의해 지배된다. 대리인이론은 사회적 관계를 위임자와 대리인의 계약적 관계로 본다.

(2) 내 용

① 합리적 선택에 기초를 둔 신제도경제학은 종래 고전파의 기본가정인 ‘완전경쟁시장과 이기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인’의 가정들을 적실성 있게 완화함으로써 더욱 역동적인 이론을 전개하고 있다. 고전학파가 시장의 마찰(비용) 없는 거래를 전제하는 반면, 신제도경제학은 시장기구의 이용에 일정한 비용이 든다고 본다. 따라서, 거래비용의 한 형태인 계약의 수행 및 통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들의 선호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어떠한 유인구조에 의해 이러한 비용(대리인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중심으로 발전한 것이 주인-대리인이론이다.

② 주인-대리인 접근법에 따르면 사회적 관계는 한 사람(위임자)이 다른 사람(대리인)에게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일정행위를 위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계약에 의해 성립한다. 이러한 위임관계는 주인(위임자)이 대리인보다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대리의 문제가 다음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 대리인의 선호 내지 이익이 주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 대리인이 과연 주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를 감시할 수 있다.

(3) 대리인이론

① 대리인은 주인에게 행정 내부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국민-관료·정치인, 지주-소작인, 주주-전문경영인 관계).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으므로(이기적 인간) 양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

② 따라서 양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한다.

③ 정보의 비대칭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부고발자의 제보가 필요하고 내부고발자(whistleblower)가 활성화되어야 한다(성과금 지급)

(4)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① 역선택

역선택은 정보의 불균형(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한 형태로 정보를 갖지 못한 거래당사자가 불리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역선택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중고자동차시장이다. ‘역선택’은 보험계약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주인인 보험회사는 대리인인 피보험자가 건강한 사람이라고 상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나, 건강한 사람이 건강한 것처럼 속이고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이다(생명보험허위로 가입).

②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에 가입했다라도 평소와 같이 성실한 안전운전을 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실적으로 소홀히 할 수 있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음주운전).

문19. 지방자치법상 광역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도에서 처리한다.

②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③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④ 행정처리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는 시·도에서 처리한다.

[정답 ①] ①번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가 서로 경합하면 시·군 및 자치구가 우선 처리한다.

<출제의도 : 약자 우선원칙이며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가 우선한다는 보충성원칙에 대한 이해하기><참행정학.p.935>

문20.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법은 주민투표의 대상·발의자·발의요건, 그 밖의 투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 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해 원칙적으로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3분의 2 이상의 득표로 확정된다.

[정답 ④]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참고로 주민소환에 관한 확정도 동일하다.

<출제의도 : 시사적인 문제로 주민투표법 이해하기><참행정학.p.874>

<참고> 주민투표법<2004.1>

제5조 (주민투표권)

①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②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7조 (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 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계약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5%서명)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를 제외한다)
  2.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외국인
- ③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 (주민투표결과의 확정)

- ①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 ②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